

하천 정비사업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 점검

도내 하천 정비사업의 국고보조금 집행 실태에 대한 일제 점검이 이뤄진다.

원주지방국토관리청(청장:전만경)은 29일부터 5월6일까지 6주간 관할구역 내 지자체에 교부한 하천 정비 및 하천유지보수 국고보조사업에 대해 현장실사 등을 벌인다.

원주청은 이번 점검을 통해 지자체의 국고보조금 목적 외 사용 등 부정 수급 전반

에 대해 살펴보고 이에 대한 방지 대책을 마련한다. 주요 중점 점검 사항은 지방비 부담예산 확보 여부, 보조금 집행 잔액 정산 여부, 보조금 목적 외 사용 여부, 총사업비 및 설계변경 사전 협의 여부 등이다.

전만경 청장은 “보조금을 목적 외로 사용했거나 집행 잔액을 미정산한 지자체는 예산 편성 때 페널티를 부과하게 된다”고 말했다. 원주=유학렬기자

강원건설 기성액 증가 일부업체 쓸림은 문제

지난해 2조7813억 실적

상위 10개 업체가 37%

11곳은 실적 신고 못해

강원지역 건설업체들의 전체 기성액은 매년 증가세지만 일부 건설사에 집중되면서 영세 업체들의 경영난을 해결할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기성액은 건설업체가 당해년도에 시공한 공사액으로 실제 매출을 의미한다.

도 건설협회에 따르면 최근 4년간 도내 공사 수주 실적은 2012년 2조1401억원, 2013년 2조9811억원, 2014년 2조2065억원, 지난해 2조9079억원을 기록, 등락을 반복하고 있다. 반면 도내 건설사들의 기성액은 매년 증가세다.

2012년 2조1396억원, 2013년 2조

2865억원, 2014년 2조3788억원, 2015년 2조7813억원이다.

건설 경기 불황에도 도내 기성액 증가는 2018 평창 동계올림픽 영향이 가장 컸다는 시각이 지배적이다. 하지만 기성액 비율을 도내 전체 건설사 614곳 중 일부 업체가 주도했다는 점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난해 총 기성액 2조7813억원 중 원주 요진건설산업이 4805억 7600만원으로 전체 중 가장 많은 17%를 차지했다.

이어 고성 현대아산 1095억4800만원, 원주 동일건설 908억원, 정선 대림종합건설 803억원 순으로 신고했다. 지난해 기성액 신고 중 상위 10개 사가 전체 37%를 차지한 반면 151개 사는 지난해 기성액이 10억원이 안됐다.

11개 사는 지난해 기성 실적을 신고하지 못했다. 안은복 rio@kado.net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 '정조준'

공정거래위원회가 유보금 설정과 추가공사·계약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관행을 정조준하고 나섰다. 공정위는 2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하도급대금 미지급 실태에 대한 직권조사에 착수한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이번 조사는 유보금 명목의 대금 미지급과 추가공사·계약변경 위탁 과정에서 발생하는 하도급계약 서면 미발급·대금 미정산 등에 초점을 맞췄다.

유보금은 원사업자가 하자보수를 담보한다는 명목으로 하도급대금의 일부를 지급하지 않고 유보시켜 놓는 금액을 말한다.

공정위가 유보금 관행을 바로잡기 위해

유보금 설정·계약서면 미발급 등 공정위, 22개 건설사 직권조사 자진시정 땀 제재조치 면제

나선 것은 지난해 서면실태조사에서 유보금 설정이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기 때문이다.

실제 서면실태조사에서 유보금 항목에 응답한 4323개 수급사업자 중 106개사가 유보금 설정을 경험했다고 답했고, 이 중 28% 정도는 유보금 설정이 원사업자의 일방적 요구로 설정됐다고 응답했다.

유보금 설정을 서면이 아닌 구두로 통지했다고 답한 수급사업자도 35%를 웃돌았다.

유보금과 함께 추가공사·계약변경 등에 따른 하도급대금 미지급 행위도 이번 조사의 중점 점검 대상이다.

지난해 서면실태조사 결과 건설업 수급사업자의 55%가 추가공사·계약변경 때 서면을 교부받지 않았다고 응답했고, 대금이 제대로 지급되지 않은 경우도 적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공정위는 서면실태조사와 익명제보 등을 통해, 유보금을 설정하고 추가공사·계약변경 과정에서 서면 미발급 등 혐의가 나타난 22개 건설사를 대상으로 직권조사를 우선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이번 조사 결과 많은 업체에서 범위만 협의가 확인될 경우 올해 안에 1~2차례에 걸쳐 추가조사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이다.

공정위는 위반행위가 적발되면 수급사업자가 대금을 신속히 받을 수 있도록 최대한 자진시정을 유도하기로 했다.

조사 개시 전 자진시정할 원사업자에 대해선 과징금 부과 등 모든 제재조치를 면제하고 조사 개시 후 30일 내에 자진시정할 경우 벌점과 과징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박경남기자

춘천시, 청사 신축 첫삽... 2018년 준공

기존 건물 60년만에 철거

강원 춘천시가 28일 현 부지에서 청사 신축 기공식을 열고 본격적인 공사에 들어갔다.

이날 행사에는 최문순 강원지사와 최동용 춘천시장, 시민 1000명이 참가했다. 기공행사는 식전공연에 이어 국기와 시기 강하식, 청사 일부를 철거하는 퍼포먼스 순으로 열렸다.

또 부대행사로 시청 옛 사진전, 시청 건물에 낙서하기, 잉크탄 쏘기, 시장실에서 즉석 사진 이벤트가 마련됐다.

특히 이날 식목일을 앞두고 나무 5000여그루를 나눠주는 '행복나무 나눠주기' 행사도 벌였다.

춘천시 청사 신축은 1957년 현재 옥천동 부지에 들어선 지 60년 만에 기존 건물을 철거하고 새로 짓는 것이다.

새 청사는 지하 2층에 지상 8층 규모

(전체면적 2만1000㎡)로 기존 청사(1만4000㎡)보다 1.5배가량 넓다.

근대문화재인 기존 청사 내 옛 춘천문화원 건물은 역사전시관과 카페로 활용되며, 인근에 3층 규모의 시의회 건물(3200여㎡)도 함께 건립된다.

지하 1, 2층엔 주차장(500대), 지상 1층엔 민원실을 중심으로 카페, 금융기관, 식당이 들어서며 출입구 앞에는 광장(호반광장)이 설치된다.

청사 출입구는 현재 시청사 정문에서 옛 춘천여고 방향 도로 가운데와 한국은행 강원본부 뒤편, 옛 한국은행 관사에서 옛 춘천여고 방향 등 3곳이다.

건립비용은 900억원가량으로 2018년 상반기 준공이 목표다.

공사 기간 임시청사는 현 부지 인근 옛 춘천여고 건물에 마련했으며 시장실과 국장실, 총무과 등 일부 부서는 운동장에 30여개 동으로 연결된 컨테이너에서 근무한다.